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7년 5월 9일

제07-24호

일본 농업개혁의 현황과 시사점

정성춘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팀장 (jung@kiep.go.kr, Tel; 3460-1202)

김은지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전문연구원 (eunji@kiep.go.kr, Tel; 3460-1035)

주요 내용

- ▣ 일본이 체결한 FTA를 살펴보면 일본의 개방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 원인은 일본 농업의 개방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임.

 - 자국 농업에 대한 지나친 보호가 일본 대외경제정책 전반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최근 일본정부는 농업개혁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음.
- ▣ 일본정부는 1999년 제정된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구체화한 ‘21세기 新농정’ 개혁안(2006년)을 통해 농업개혁에 착수함.
- ▣ 개혁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음.

 - 농업보조정책의 범위를 일부 대규모 영농지로 한정하고 가격보조에서 소득보조로 정책을 전환함. 이는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주식회사 등의 농업 진입이 허용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농업재생기구’ (가칭) 등을 설립하여 농지의 집약화, 대규모화를 촉진하고자 함.
- ▣ 농업에 대한 보호수준이 매우 높은 일본도 농업구조의 근본적인 재점검과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같이 우리 정부도 농업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1. 일본의 FTA 체결 현황 및 양허수준

- 2006년 일본은 필리핀과 네 번째로 FTA를 체결하였고 2007년에는 칠레, 태국과 FTA 체결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하는 등, 역내외국과의 경제통합을 주도하기 위해 최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일본이 체결한 FTA 상품교역의 양허수준을 보면 일본의 시장개방이 상대국에 비해 항상 낮은 수준임.
 - 일본의 양허율은 對싱가포르 수입이 94%(상대는 100%), 對멕시코 수입이 87%(상대는 98%), 對말레이시아 수입이 94%(상대는 99%), 對필리핀 수입이 92%(상대는 97%), 對칠레 수입이 90.5%(상대는 99.8%), 對태국 수입이 91%(상대는 98%)로 나타남.
- 이처럼 일본의 양허수준이 상대국에 비해 낮은 이유는 농업이 취약하여 농림수산물 부문에서 관세철폐 예외품목을 설정하는 등, 농업개방수준이 낮기 때문임.

표 1. 일본의 FTA 체결 현황 및 상품교역의 양허수준

(단위: %)

상대국	체결 현황	상품교역의 양허수준	
		일본의 양허율	상대국의 양허율
싱가포르	2002년 11월 발효	94.0	100.0
멕시코	2005년 4월 발효	87.0	98.0
말레이시아	2006년 7월 발효	94.0	99.0
필리핀	2006년 9월 서명	92.0	97.0
칠레	2007년 3월 서명	90.5	99.8
태국	2007년 4월 서명	91.0	98.0

주: 양허율은 양국간 교역 금액 기준임.

자료: 2007년 4월 10일 현재 외무성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2. 일본의 농림수산물 시장개방

가. 일·멕시코 FTA

- 일본정부는 자국 농림수산물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싱가포르를 첫 번째 FTA 상대국으로 선정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음. 일본 농림수산물 시장개방이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은 멕시코와의 FTA 협정에서였음.

- 일·멕시코 FTA의 약 850개 농림수산물 중 양허 품목은 46%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무관세품목에 해당됨.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쿼터를 부여하거나 예외품목으로 제외함.
- 특히 마지막까지 협상에 진통을 겪었던 돼지고기는 무관세 수입을 주장한 멕시코측이 양보하여 TQR(저율할당관세) 적용에 합의했고, 쇠고기, 닭고기, 오렌지, 오렌지 주스도 TQR로 처리했으며 각 품목에 대해 협정 발효로부터 5년 이후 재협의를 결정함.

표 2. 일·멕시코 FTA의 농림수산물 합의 내용

	주요 품목
저율할당관세 적용	돼지고기(8만 톤), 쇠고기(6천 톤), 닭고기(8천 5백 톤), 오렌지(4천 톤), 오렌지 주스(6천 5백 톤)
예외품목	밀, 꿀, 사과, 유제품, 설탕, 다랑어 등

자료: 日本 外務省

나. 일본과 아세안 국가간 FTA

- 일본은 ASEAN 국가로부터 농업부문의 대폭적인 양보(낮은 수준의 농업개방)를 받아내는 한편,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제조업을 높은 수준으로 양허하고 일본기업의 투자확대 및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FTA 전략을 추진해왔음.

- ASEAN 국가들이 일본과의 FTA 체결 과정에서 일본의 농림수산물 및 노동시장 개방을 강조한 반면, 일본은 농림수산물 등 민감한 부문의 개방은 어렵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협력에 비중을 둔 협상을 추진해왔음.
- 일본은 ASEAN 국가와의 FTA에서 주요 농림수산품을 예외품목으로 설정하고 자유화품목에 포함된 농림수산물도 그 자유화 폭을 매우 제한하고 있음.

■ 일·싱가포르 FTA

- 일본정부는 농림수산품이 양국간 교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불과한 싱가포르와의 FTA에서조차 다랑어, 코코아 조제품, 유제품, 조제식용기름, 식물성지방 등을 예외품목으로 처리함.

■ 일·말레이시아 FTA

- 말레이시아와의 FTA에서 관세철폐품목은 열대과일(망고, 망고스틱, 두리안, 파파야 등), 합판 이외의 임산물, 코코아 조제품, 새우 등임. 반면 국가무역품목(쌀, 보리, 특정지정 유제품),¹⁾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할당 적용 수산물 등은 제외하거나 재협의하기로 결정함.

■ 일·필리핀 FTA

- 필리핀과의 FTA에서도 국가무역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전분가루, 파인애플 통조림, 합판, 수입할당 적용 수산물 등을 제외하거나 재협의 품목으로 결정함.
- 이외에 파인애플, 닭고기는 TQR로 처리하고, 일부 수산물은 협정발효 후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결정함.

표 3. 일·ASEAN 국가간 FTA의 관세철폐 예외품목

국가	농림수산물 중 주요 관세철폐 예외품목
싱가포르	다량어, 코코아 조제품, 유제품, 조제식용기름, 식물성지방 등
말레이시아	쌀, 밀, 보리, 특정지정 유제품, 쇠고기, 돼지고기, 전분가루, 수입할당제도 적용 수산물 등
필리핀	쌀, 보리, 특정지정 유제품, 쇠고기, 돼지고기, 전분가루, 파인애플 통조림, 수입할당제도 적용 수산물, 다량어·청새치 생선류, 합판 등
태국	쌀, 보리, 쇠고기 및 돼지고기, 정제설탕, 정제하지 않은 설탕, 전분가루, 파인애플 통조림, 합판, 수입할당제도 적용 수산물, 가다랭이, 다량어, 쇠고기·돼지고기 조제품의 대부분, 지정 유제품 등

자료: 信金中央金庫 종합연구소(2006. 12. 20), 「日本とアジアの自由貿易協定の現状と課題」.

■ 일·태국 FTA

- 태국과의 FTA에서 태국측의 관심 품목 중 두리안, 망고 등 열대과일과 새우 등의 관세철폐를 약속함. 반면에 국가무역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할당 적용 수산물, 설탕, 전분가루 등은 제외하거나 재협의하기로 결정함. 닭고기와 파인애플은 각각 관세인하와 TQR로 처리함.

- 일본의 농림수산물 시장개방 수준이 낮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이해조정 메커니즘이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임. 한편 이 같은 일본의 농업시장 개방에 따라 일본과 FTA를 체결한 상대국은 자동차 등 공산품에 고율관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일본 산업계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임.

1) 국가무역품목은 국가가 수출입의 주체가 되어 구매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품목으로 일본에서는 현재 수입에서 쌀, 보리, 지정 유제품 등이 국가무역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3. 일본 농업개혁의 배경과 추진방향

가. 배경

- 일본 농업은 농업종사자 감소와 고령화, 경쟁력 약화, 경작지 폐기, 식량자급률의 하락, 농가소득 보전정책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부담 등, 취약점을 안고 있음. 일본 농업현황 지표를 196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비교해보면 농지면적, 농업취업자, 농가구수, 1가구당 경지면적 등 모두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생산규모: 1960년부터 1990년까지 증가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수입 증가와 소비 정체로 생산규모 자체는 오히려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같은 기간 일본의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도 9%에서 1%로 감소함.
- 농업취업인구: 농업종사자는 1960년 1,196만 명에서 2003년 259만 명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1960년의 22% 수준에 불과함.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종사자의 비중은 같은 기간 10%대에서 60%대로 상승,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임.
- 농가구수: 1960년 대비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 중 전업농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겸업농가는 50% 이상 증가하여, 전업농가를 중심으로 한 전문적인 대규모 생산이 곤란한 상황임.
- 농업경쟁력: 일본은 미국과 비교해 생산규모, 재배방식, 노동비용, 농기구비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쌀 생산비용을 기준으로 약 5~8배의 격차가 발생할 정도로 농업경쟁력이 크게 약화됨.
- 식량자급률(칼로리 기준): 같은 기간 79%에서 40%로 크게 하락함.

표 4. 일본의 농업관련 주요 지표의 추이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3년
농업생산지수	80.1	100.6	105.0	111.1	100.0	92.4
경작지면적	607	580	546	524	483	474
농업취업인구	1,196	811	506	392	288	259
농가구수	606	534	466	384	312	298
1가구당 경지면적	1.00	1.09	1.17	1.36	1.55	1.59
식량자급률(칼로리 기준)	79	60	53	47	40	40

주: 단위는 농업생산지수: 2000년=100, 경작지면적: 만 ha, 농업취업인구: 만 명, 농가구수: 만 가구, 1가구당 경지면적: ha, 식량자급률: %임.
 자료: 浅子和美·篠原總一(2006), 『入門日本經濟』.

나. 추진방향

- 이러한 일본 농업의 취약성은 높은 수준의 농산물시장 개방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FTA에서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일본정부는 FTA라는 외압을 이용하여 농업 부문의 구조개혁을 단행하고자 함.
- 일본정부는 목표인 농업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농업생산 규모를 확대하여 생산비용과 가격을 인하하고, 이를 통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하고자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그 동안 일본정부가 추진한 농업개혁의 경과는 다음과 같음.
- 일본의 농정 기본이념과 시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해온 「농업기본법」을 대신해, 1999년 7월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이하, 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발표함.
- 기본법은 21세기 농업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정책이념으로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 확보 △다면적 기능 발휘 △농업의 지속적 발전 △농촌의 진흥을 제시하고 있음.
- 기본법에 따라 2000년 3월에는 농업개혁의 근간이 되는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 책정되었고, 기본법 규정에 따라 5년 만에 최근 정세 변화와 시책의 평가를 반영한 개정안이 2005년 3월 발표됨.
- 아울러 일본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농업개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6년 ‘21세기 新농정’이라는 개혁안을 발표함.
- ‘21세기 新농정’에서는 기본적으로 40%에 머무르고 있는 식량자급률(칼로리 기준)을 45%로 끌어올려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4. 일본 농업개혁정책의 주요내용

- ‘기본계획’과 ‘21세기 新농정’ 개혁안에서는 국내 농업의 체질 강화를 위해 농업경영의 집중화·중점화 필요성과 농산물·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농업을 주요 목표로 함.

- 또한,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 산하에 설치된 'EPA·농업 Working Group'은 농업부문에서 구조개혁의 진척 상황을 고려하면서 각국과의 FTA 협상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함.

가. 품목별 가격보조정책에서 소득보조정책으로 전환

- 일본정부는 종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한 품목별 가격보조정책이 일본 농업을 정체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여, 경쟁력 있는 농가만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농업에서도 시장원리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를 책정함.
- 품목별 가격보조정책은 모든 농가에 일률적으로 생산자가격을 보장해 주는 보조방식으로, 이는 농업생산자가 소비자의 수요와 시장 동향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지 않아도 판매액을 보장받게 되는 문제점이 존재함.
- 따라서 종래 모든 농업종사자에게 지원해주던 가격보조정책을 개선하여, 2007년부터는 농업 경영의 안정화와 집중화·중점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함.
 - 경영규모 4ha 이상의 인정농업자,²⁾ 20ha 이상의 집락경영³⁾에 한정하여 지원하기로 변경함 (단, 중산간지역이나 복합경영의 경우에는 특례조치를 마련함). 이와 같이 경영방식에 착안한 정책 도입으로 경영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외국과 생산조건 격차가 발생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 '생산비용과 판매수입 차액보전정책'과 농가 연수입 감소액(과거 평균수입보다 적을 경우)의 90%를 보전해 주는 '수입변동영향 완화대책' 같은 직접지불방식의 제도가 도입됨. 이로써 종래 품목별 가격보조정책이 중단되고, 품목과 상관없는 소득지원정책으로 전환됨.
 - 농업경영자에 대한 총 35억 엔 규모의 종합지원사업이 마련됨. 종합지원사업을 통해 경영상담, 기술지도, 농지이용조정 등 농업경영자에 대한 지원활동이 총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이 외에도 인정농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이자융자제도, 농지의 집적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생산법인 육성긴급사업, 경영규모 확대와 생산조정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촉진사업 등이 새롭게 마련됨.

2) 인정농업자는 경영개선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지자체의 기본구상에 적절하고 △계획이 달성될 것이 확실하며 △농지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이용을 도모하는데 적절한지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지자체로부터 인정받은 농업자를 지칭함.

3) 집락경영은 집락 등 일정한 지역내 농가가 농업생산을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공동으로 영업·판매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으로 형성되어 있음.

나. 주식회사의 농업경영 참여

- 2008년부터는 ‘농업재생기구’를 활용하여 농지를 집약하는 제도를 창설하기 위해 검토 작업에 착수하였음. 또한 이렇게 집약화된 농지를 활용하기 위해 법인기업의 농업 진입을 허용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 농지임대차제도(농지의 임대신탁, 농지정기임차권 등)의 개선을 통하여 농지이용집적과 리스 방식에 의한 주식회사의 농업 신규진입이 추진되고 있음.
- 현재 검토 중인 ‘농업재생기구’ (가칭)는 농지 대규모화를 도모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하에, 경작포기지·유휴지 등의 이용권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등 새로운 농업 담당자에게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고안된 것임.
- 농업재생기구는 전국 지자체가 공동출자하여, 지역 사정에 정통한 농업 관계자들을 전문가로 활용하여 매매중계역을 담당시킴. 토지의 장기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최저 10년 이상의 농지 활용을 매각 조건으로 제시함. 2008년도부터 지자체별로 도입될 예정임.
- 한편, 일본에서는 구조개혁특구의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농업부문에 법인기업 진입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 이는 지자체가 유휴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지역 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지역 실정에 따른 농지취득을 허용함으로써, 주식회사가 농업경영을 시행하는 등 농업부문으로의 신규참여를 촉진하는 특구제도임.
- 2005년 6월부터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기업들이 임대방식을 통해 농업에 진입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가능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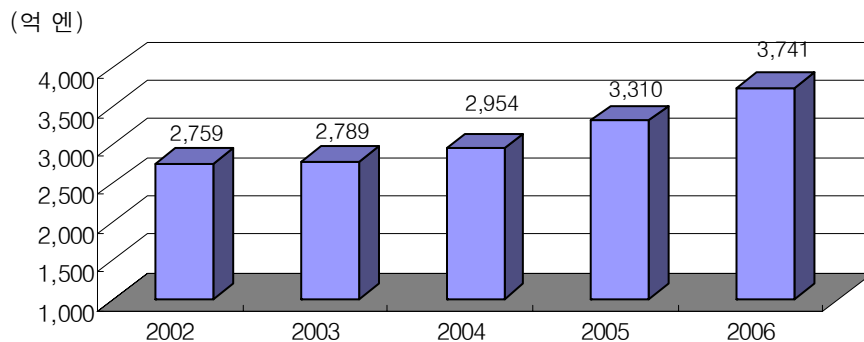
다. 수출지향의 공격적인 농업

-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농림수산품의 수출실적이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일본정부는 농림수산물물의 수출규모를 2013년까지 1조 엔으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내세우는 등 ‘공격적인 농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농림수산품의 수출 증가세는 일본음식에 대한 붐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아 국가에서는 경제발전을 배경으로 일본의 고품질 농림수산물과 식재료에 대한 부유층의 소비가 확대되는데 기인함.

- 2006년 농림수산품의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13.0% 증가한 3,741억 엔을 기록함.
-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과일·야채(귤, 배, 포도, 메론, 딸기, 토마토) 등이 많이 수출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가공식품(녹차, 간장, 햄, 소시지, 와사비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 북경, 상해, 홍콩, 방콕, 대만의 고급백화점들은 일본산 식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상설점포를 설치하고 있음.

<그림 1> 일본 농림수산품의 최근 수출실적



자료: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 이에 농림수산품의 수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2005년 4월에는 민관 협력을 강화한 '농림수산물 수출촉진 전국협회'가 설립되었고, 같은 해 6월에 '농림수산물 수출배증 행동계획'이 책정되었음.

-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출촉진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검역조건, 수출증명서 발행체제 등 수출환경 정비
- 품목별 수출실행계획의 책정 등 품목별 수출지원전략 수립
- 일본 음식 및 식재료에 대한 정보를 해외로 발신
- 수출 의욕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계별 지원 실시
- 수출대상국의 안전성 등에 대한 기준을 지원
- 수출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의 단계별 기반 확충
- 수출 브랜드 전략 추진
-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수출상대국 개척, 품목 발굴 등

라. FTA 활성화를 위한 일본 농업의 대응방안

- 경제재정자문회의 산하 'EPA·농업 Working Group' 은 FTA 활성화를 위한 일본 농업의 국제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음. 여기서의 논의사항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농업부문의 FTA 협상전략과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음.
- 글로벌화하는 세계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관세인하를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
- FTA 협상에서 농업분야 처리에 관한 합의를 조속히 형성하고, 정부 내부의 갈등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확립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농업종사자에 대한 인정 제도가 아니라 경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 농업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농업전문 노동자의 수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
 - 현재 일본은 '농업협동조합' 과 '농업기술협력 공익법인' 등을 통해 농림수산·식품제조업 부문에서 한 농가당 2명까지 1년 기간의 외국인 연수생을 수용하고 있음.
 - 일본정부는 농지의 효율적 활용과 농업생산자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연수생제도를 확대하여 외국인 농업전문 노동자를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쌀 중심의 농업정책을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 근본적으로 일본 농업의 비교우위를 높이는 농업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일본이 현재까지 체결한 FTA 협정을 보면 일본의 개방수준은 상대국보다 항상 낮게 나타나고 있음. 그 이유는 일본의 농업개방수준이 매우 낮아서 전체 개방수준을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임.

- 일본의 농업개방수준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핵심적인 농림수산물(쌀, 주요 과일,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및 주요 생선)은 기본적으로 개방 예외품목으로 설정하였고 개방하는 품목도 할당관세 등으로 개방수준을 매우 낮추고 있음.
- 일본은 농업 보호를 위해 낮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나, 그 결과 자동차 등 완성품에 대한 상대국의 고율관세 철폐에 실패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최근에는 농업이 일본의 적극적인 FTA 정책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일본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농업정책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시책을 바꾸어 왔음.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농업에 대한 보조정책을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한 가격보조정책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보조정책으로 전환함. 이를 통해 농업규모 확대를 유도하고 있음.
 - 둘째, 주식회사 등 법인이 농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단행하여 영농주체의 경영능력을 제고하려 하고 있음.
 - 셋째, 대규모의 농지를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는 경영주체에게 임대하기 위해 '농업재생기구' (가칭)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일본 농산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농업부문에 대한 보호가 강한 일본정부가 최근 미약하나마 농업구조개혁을 추진하고자 노력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음.
 - 첫째는 농업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적극적인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우리나라도 농업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음.
 - 둘째는 일본의 농업보조정책이 품목과 모든 농업인에 대한 보조정책에서 대규모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보조정책으로 크게 전환되었다는 점임.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농업에 대한 보조 일변도의 정책은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는 영농의 대규모화를 촉진하는 유인책으로 그 효과가 기대됨.

- 셋째는 영농의 대규모화를 촉진하는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임. 또한 주식회사 등 법인기업의 농업 진입을 허용하는 시범적 사업 실시도 추진되고 있음. 농업구조가 일본과 매우 유사한 우리나라로서도 참고할 만한 개혁 사례라고 볼 수 있음.